2013년 법조윤리 모의시험 (총 15면)

* 시험시간 : 70분

* 일체의 자료를 볼 수 없음.

[문 1] 변호사윤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직무 외에서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존재이지만, 직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가 상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관례에서는 변호사가 상인이라고 한다.
- ④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문 2]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부의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甲은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여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한다. 甲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 ②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그 후에도 5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 ③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 ④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변호사의 결격사유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문 3]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임계약이 종결된 후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④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이므로 수임인인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문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 ② 변호사는 법정외의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 진행의 순서를 다투어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과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 ④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문 5] 변호사 甲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A의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A의 지인인 B로부터 의뢰받았다. 甲은 구속된 A와의 접견 중 A는 사고 차량의 동승자에 불과하며 사고 당시 실제 운전은 B가 하였는데 B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B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A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최대한 관대하게 유죄판결을 받기를 원한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의 의뢰인은 B이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성실의무가 있는 甲은 A가 사건 당시 실제 운전자라는 것이 재판상 인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② 甲에게는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건 당시 실제 운전자가 A가 아니라 B라는 것을 법정에서 밝힌다.
- ③ 甲은 진실을 밝히자고 A를 설득해 보고 A가 이를 듣지 않는 경우 사임한다.
- ④ 甲은 법정에서는 A가 운전자라고 주장하고 따로 법관을 만나 사실은 B가 운전자라고 밝혀서 A에게 관대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한다.

[문 6]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변호사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7]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자신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 ② 변호사윤리장전상 의뢰인의 과거의 범죄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③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는 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여도 무방하다.

[문 8] A는 변호사 甲이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 ③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9]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민사사건에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그 타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도 압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③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증언을 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문 10] 변호사윤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을 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② 변호사는 섭외사건이나 국제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 외국의 변호사윤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았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의뢰인의 비밀정보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문 11] 2009년 1월 A는 자동차사고로 B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죄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 甲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B가 C를 상대로 2008년에 대여한 금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甲에게 수입을 의뢰하였다. 甲은 B가 의뢰한 이 사건을 수입할 수 있는가?

- ① 대여금 반환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 허용된다.
- ② 현재 수입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 ④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 12] 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입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L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X건물에 관한 매매잔대금청구소송을 A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 ① 건설업자 C가 A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X건물의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입하였다.
- ② B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D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건물인도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입하

였다.

- ③ 설문의 매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후 B가 A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계약금, 중도금 반환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입하였다.
- ④ 乙이 설문의 사건에서 B의 대리인으로 먼저 선임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A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A의 대리인을 사임하고 그 취지를 A에게 알렸다.

[문 13]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상담하고 수입하기로 하여 A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가 약정된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A에 대한 변론준비를 하기도 전에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그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B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A와 체결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B가 甲에게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위임하려고 할 경우, 甲이 위 사건을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피해자로서 A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자이고, A의 보험자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그 분쟁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같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甲은 A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 손해배상사건을 수입할 수 없다.
- ② C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A와 이해가 상반되는 상대방이 아니므로 甲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입할 수 있다.
- ③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재판 절차가 달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입할 수 있다.
- ④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안에서는 甲이 A에 대한 변론준비를 하기도 전에 A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甲은 A의 동의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입할 수 있다.

[문 14]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입할 수 있는가?

- ① 변호사 甲은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A의 위 형사사건 및 대여금청구소송을 모두 수입할 수 있다.

-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 및 대여금청구소송을 모두 수임할 수 없다.

[문 15]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②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 ③ 의뢰인의 양해가 있으면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문 16]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 ① 자신의 업무능력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과거에 취급·관여한 사건 및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을 표시하는 내용을 광고하였다.
- ②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상담료는 무료”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지하철 전동차 선반 위에 민사법 및 형사법의 주요 취급업무 내용을 기재한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 ④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일간신문 발행인과의 사이에 분야별로 뛰어난 법무법인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의 외양을 갖추어 해당 법무법인을 홍보하는 유료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게 하였다.

[문 17]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5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3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 ③ 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문 18]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 19]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승소로 간주한다’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 ②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 ③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용된다.
- ④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문 20] 변호사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는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로 간주 되었다면, 이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에 준한다.

[문 21]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는 변호사 甲을 선임하여 담당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실의에 빠진 A는 우연히 변호사 乙이 담당재판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는 乙을 선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다시 하기 위하여 乙에게 접견을 요청하였다.

乙이 A를 접견하여 상담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乙은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에 대해 경솔한 비판을 삼가야 한다.
- ③ 乙은 A에게 “자신이 선임되어 다시 보석허가청구를 하면 담당재판장이 절친한 친구 사이이므로 보석허가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 ④ 위 사기 사건에는 이미 甲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乙은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문 22] X회사의 고문변호사인 변호사 甲은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 ② 변호사 甲은 X회사의 양해를 얻으면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③ 변호사 甲이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한 경우,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다.

[문 23]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조윤리협회의회의 위원은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혹은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으로 구성된다.
- ②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7년에 도입되었다.
- ③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공직퇴임변호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 24] 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선변호인이 사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 ③ 국선변호인이 변호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④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교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25]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은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므로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 총시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법조경력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문 26] 변호사 甲은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A와 음식 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A를 밀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甲은 그 행위 때문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甲의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로서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④ 일상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7]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A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甲의 패기 넘치는 변론에 감동받은 상대방 B가 다음날 자신의 C에 대한 대여금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甲은 A에게 즉시 이를 통보한 후 B와 수임을 약정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甲의 수임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다른 사건이므로 甲의 수임행위는 적법하다.
- ②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해당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수임할 수 없다.
- ③ 甲이 A에게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수임한다는 것을 즉시 통보하였으므로 적법하다.
- ④ 다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의 동의 없이 상대방 B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위법하다.

[문 28] 변호사 甲은 2002.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3.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8.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2.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 29]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 30]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 ①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사람
- ②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난 사람
- ③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파면된 후 3년이 지난 사람

[문 31] 변호사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수약정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의뢰인과의 사이에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종결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를 전액 청구할 수 있다.
- ③ 의뢰인과 변호사의 평소 관계는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고려 요인이 될 수 없다.
- ④ 사건 수입경위, 사건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등은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문 32] 변호사 甲은 변호사 아닌 乙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후 乙을 통하여 수입하는 사건의 수입료 중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 안 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변호사 甲의 위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甲과 乙 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사무직원으로 등록한 이상 甲과 乙 간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乙은 근로계약에 따라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 간에 체결한 위와 같은 약정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甲은 乙을 통하여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 33] 2011년 1월 대구지방법원 판사 甲은, A기업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배당받아 공판기일만 정한 상태에서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것을 계기로 판사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1년 뒤 A기업의 대표이사 B가 甲에게 위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수입을 의뢰하였다. 甲은 이 사건을 수입할 수 있는가?

-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B가 동의한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다.
- ③ 판사로서 취급한 사건이므로 수입할 수 없다.

④ 판사로서 취급한 사건이지만 수임할 수 있다.

[문 34] 판사와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의견 등을 표명한 행위 중 법관윤리강령 또는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 A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자신이 예상하는 재판 결과를 설명하는 인터뷰를 하였다.
- 나. 사법연수원 소속 판사 B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외부 강사로 강의하면서 학생의 이해를 돕고자 자신이 과거에 담당한 재산범죄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그 법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보담당관인 검사 C는 최근 소속 청의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기자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고는,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공보자료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설명하였다.
- 라. 광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D는 부산지방법원 소속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다른 판사의 재판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서 이를 알리고자 그 재판의 진행방법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신문에 기고하였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문 35]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된 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을 잃는다.

[문 36]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 ① 변호사가 계쟁권리를 양수한 경우
- ②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합격 4개월 후 친척이 피고가 된 사건을 수임한 경우
- ③ 변호사가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 ④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경우

[문 37] 변호사의 직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 ② 개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도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
- ③ 개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도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
- ④ 개업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문 3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 ②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개인변호사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 ③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그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관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문 3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변호사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변호사가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리 그 관계를 의뢰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④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더라도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다면 심급대리 원칙상 상소시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문 40]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법령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② 외국법자문사 신청인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법무부장관은 그중 하나의 국가만 원자격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외국법자문사가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경우 외국법자문사뿐만 아니라 고용된 변호사·법무사·변리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④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